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

쉽게 읽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해설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 책의 내용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www.knowhow.or.kr)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

쉽게 읽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해설서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

쉽게 읽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해설서

2013년 7월 27일 발행

펴낸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6층
전화 1688-0523 FAX 02-713-1219
홈페이지 www.knowhow.kr

이 책의 내용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www.knowhow.or.kr) 에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Contents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

쉽게 읽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해설서

발간사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 _06
해설 1	2007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_08
해설 2	대화록에 나타난 남북정상회담의 기초 _12
해설 3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 _16
해설 4	두 정상간 쟁점과 합의사항 _22
해설 5	2007 남북정상회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TIP _30
해설 6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좌절 _44
해설 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왜곡·날조 _48
해설 8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들 _58
부록	2007 남북정상회담 Q&A _68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금단의 선을 넘어 남북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당당하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등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며 정상회담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합의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민족사에서 또 한걸음의 진보를 이뤄낸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등이 이런 남북정상회담 성과

를 터무니없이 왜곡·날조·편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적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남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폭거입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외교망신과 국기문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책은 왜곡·날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을 담은 해설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치적 이유로 불법 공개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은 마땅히 법과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들에 의해 허위로 왜곡·날조되어 유포되고 있는 사실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 책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정치적 난독증 치유를 위한 작가 유시민의 힐링강의>(2013.7.3.)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고 덧붙인 글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두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 참여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결실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남북정상회담은 단지 정치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과 동북아 평화변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평양에 특사로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북측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2005년 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남북이 논의를 진행시켰으나 9.19 공동성명 직후 발생한 BDA사건으로 인해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 7월 초 우리 정부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2차례의 협의 끝에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고 이를 전달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고 전달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준비기획단을 꾸리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분야 등 총 7개 부문의 방북단 300명과 함께 금단의 선을 넘어 남북분단 이래 두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또 발전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은 지워지고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대화록에 나타난 남북정상회담의 기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당시 전해진 기록 등을 보면,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경직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날 파국 위기에 봉착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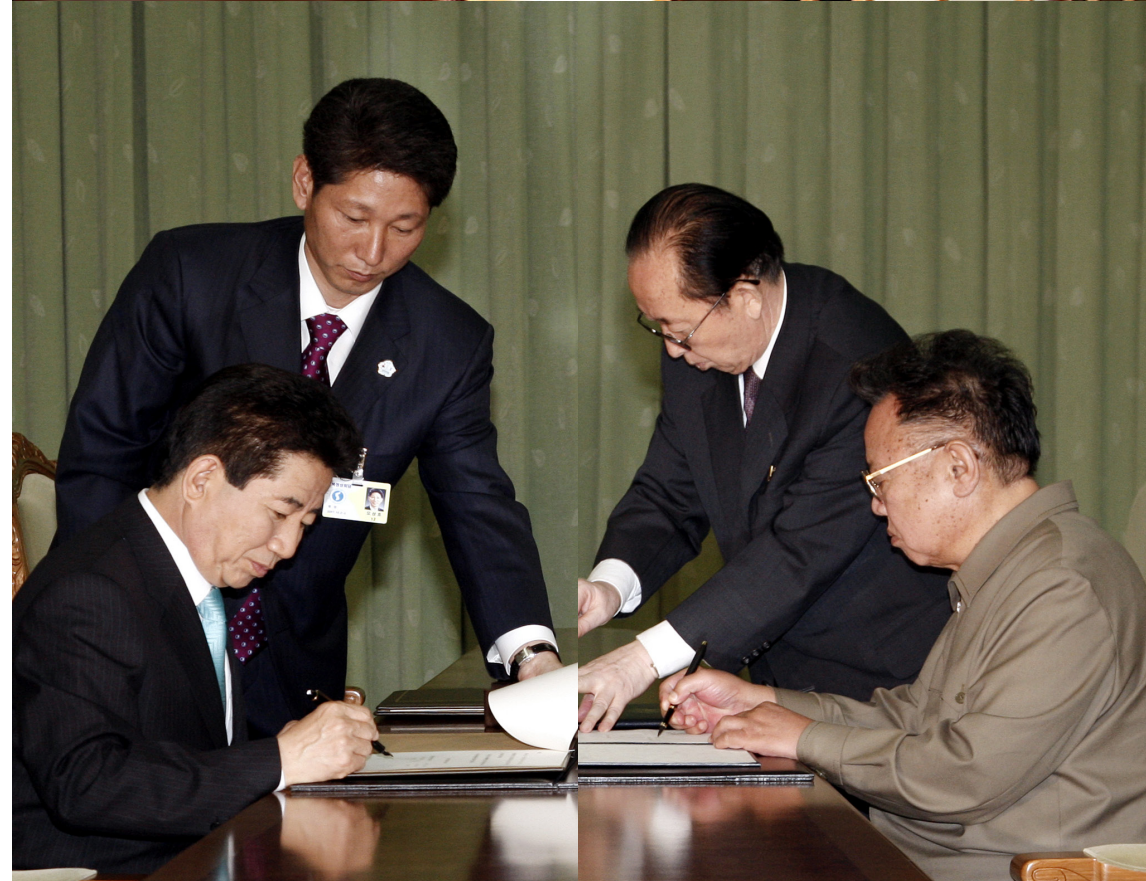
공개된 대화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 회담은 누가 미리 계획하거나 연출한 대로 흘러간 회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매우 논쟁적이라고 할 만한 담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 체제의 강점과 약점을 대놓고 언급하는 말과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말도 오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여론과 남측 언론의 감시와 비판, 야당의 견제 등을 고려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만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고,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전체주의 체제의 유일한 최고권력자로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회담에 임했습니다.

첫날 오전 회담의 분위기는 경직되고 긴장됐지만, 오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회담이 어려웠던 이유가 북측의 의구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참모들에게 북측의 ‘개혁’ ‘개방’ 등의 자기중심적 표현과 사고방식이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데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화록 30쪽 26~18행)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같은 시간에 인민군 수뇌부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해주 개방 문제를 상의한 끝에 긍정적인 답을 받고 회담장으로 나왔습니다. (31쪽 35~36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37쪽 15~18행, 42쪽 13~14행)

두 정상간의 대화록은 남북정상회담이 형식적 대화가 아닌 긴장감 높은 ‘실전회담’이었으며, 실무자들의 협상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거둔 매우 극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



남북정상회담 첫날 오전 회의 기조발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로 노력했음을 확인하고, “외국 정상들이 북측 이야기를 할 때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쪽, 7~12행)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의제로 ①평화정착, ②경제협력 확대, ③화해와 통일의 진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3쪽, 27~28행)

의제 1

평화정착과 관련된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루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의 체제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쟁에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로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출범,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추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한 군사협력 진전 등의 구체적 방안도 덧붙였습니다. (4쪽, 3~19행)

의제 2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된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한 과제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와 도로 개통, 금강산 관광특구 확대를 제시하면서 해주 지역에 기계와 중화학공업 중심 남북공동경제특구를 만들어 개성, 해주, 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4쪽, 25~31행)

의제 3 화해와 통일의 진전과 관련된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허용, 연 1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와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통일문제는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5쪽 3행~18행)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외에도 몇 가지 현안문제를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공동대처를 위한 높은 단계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 체결, 금강산관광의 개성 백두산 확대, 경제사찰단 상호교환, 한국전쟁 사망 군인 유해 발굴과 상호 송환,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접근을 위한 협력,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참가 등이었습니다. (5쪽 19행

~6쪽 1행)

오전 회담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 다. 의제도 달랐으며 생각의 격차도 컸습니 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 어나간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낸 평 화수역 제안은, 평화수역 아이디어는 좋으나 우리가 지배하는 해역을 공동 관리 구역으로 내놓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배석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 오후에 다시 만나자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리회담이나 장관 급 회담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14쪽 10행~15쪽 10행)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5쪽 33~34행)

단순한 답변이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왜곡해서 비난했던 발언이 대부분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주(自主)'라고 하는 철학적·정치적 가치였습니다. '자주'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것을 가장 크게 자랑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한 태도와 말로 북이 자랑해 온 '자주'의 가치를 칭송하는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결국 오전 회담을 오후에 속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회담은 오전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10.4공동선언에 등장하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정상간 쟁점과 합의사항



쟁점 1

‘자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변국가와의 관계보다 남북 우리민족 내부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우리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보장이든 경제협력이든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남이 자주성을 잃고 남의 비위를 살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듭 피력한 ‘자주론’에 대해서 ‘해명’ ‘답변’하고 ‘비판’했으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지해 온 친미국가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해방,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여서 어떤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싹둑 끊고 북한이 하는 수준의 자주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블레어 정부를 향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유럽을 중시하라고 한 기든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주 수준을 그 정도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 공화국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는 좋은 것인 만큼 점진적으로 자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15쪽 35행~16쪽 8행)

김대중 대통령의 6.15회담부터 시작해서, 자주국방, 균형외교, 작전통제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 폐지,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민심 흐름을 반영해 대한민국이 점차 자주국가로 이행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문제는 점진적 시간의 문제로 보자”고 한 것입니다. (16쪽 9행~17쪽 6행)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 또는 ‘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미관계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개성공단 반입 물품은 모두 미국 승인을 받는다, 미국은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측 계좌를 동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모든 나라 금융기관이 미국 제재를 받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중국까지 다 발을 뻗다, 기술 중속도 있다, 원자로 경수로 수출도 미국이 권리증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를 할 수 없다, 미국의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쪽 8행~18쪽 6행) 우리가 사대주의자여서 친미를 하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시작한 ‘자주’ 이념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인식 또는 완곡한 비판은 평화보장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발언에서 다시 표출되었습니다.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조선반도 비핵화’,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 보장’ 등을 6자회담을 통해 풀어가는데 찬성하지만 미국이 안 주려

고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으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 5년 내내 이런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버리면 북측도 남측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하고 적대관계를 풀어야 하고 일본하고도 아니꼬워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 남북이 완전 협력관계에 들어가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한다, 지금은 세계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계 하면 자주가 된다, 그렇게 해야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된다...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북의 자주노선이 결과적으로 고립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20쪽 29행~21쪽 17행)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의외로 긍정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대화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웁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21쪽 18행)

쟁점 2

NLL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주’에 대한 철학적 토론을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평화수역’ 또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역제안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통탄해 마지않는 소위 'NLL 발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군사회담에서 NLL문제를 의제로 다루라고 했더니 싸움만 하더라'고 탄식하면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측 인민은 자존심이 걸렸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18쪽 16행~24행)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동어로수역 제안보다 크고 차원 높은 것이었습니다. "NLL문제는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에서 협의해 가기로 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커다란 바다이용 계획을 세워서 민감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별 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NLL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만큼 두 정상이 깊이 논의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18쪽 35행~19쪽 11행)

이 '전향적 방법'의 핵심은 해주를 포함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실망감과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개방의 미끼인 것처럼 얘기

하는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런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 확산과 기술 확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화국 전체의 법 체제를 한 국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다룬 보고서를 거론했습니다. (19쪽 34행~20쪽 10행) 이 보고서들이 나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세 가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이 밝은 경제협력 사업, 예상되는 효과와 추진방안에 대한 3권의 보고서였습니다. 무슨 국가기밀을 건넸다고 하는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구를 하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든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20쪽 11행~19행)

"오후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나도 내려가겠다"는 등 농반진반의 밀고당기는 대화가 오간 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해문제에 대한 남측의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건드리는 물건이 되어 있는" NLL 문제를 풀기 위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를 하고 한강하구도 공동개발하고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을 만들어서 군대는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전후방 산

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조선산업단지 건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5쪽 20행~26쪽 10행)

그제서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화답합니다. “그거야 오후에 하지요 뭐.”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두시 반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회담은 오후에 속개되었습니다. NLL문제와 서해평화수역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담 시간은 대부분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에 쏟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일 관계정상화를 할 때 일본이 준비한다는 1백억 달러, 남북협력기금, 한국 기업의 중국과 베트남 투자 현황, 공기업의 국내외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 현황, 자금조달 방식,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 물류망, 에너지 파이프라인, 남북 농업과 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현안들을 설명한 다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8쪽 33행~31쪽 2행) 북의 체제붕괴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북 체제의 존속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NLL과 해주 개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

니다. “NLL문제는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지의 DMZ는 GP와 중화기를 철수해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서해는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찬 시간에 군수뇌부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부는 “개성을 확고히 한다면 해주를 내줄 수 있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 조치를 해서 군대는 다 철수하고 해경이 지키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선포하고 “그것이 모든 경계선과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한 번에 정리”하자고 호응했습니다. (31쪽 8행~33쪽 21행)

두 정상은 해주를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선포하고 필요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군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측 내부에서 반대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나갈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33쪽 6행~14행)

2007 남북정상회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TIP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 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과 행동을 평가하려면 이러한 헌법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군사력 행사 또는 전쟁을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영토는 ‘한반도와 모든 섬’입니다. 휴전선이나 NLL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중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땅과 바다의 북쪽 한계선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존중하면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대화록에서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들을 이슈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TIP
1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지만, 통일의 방법이나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에게 통일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상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상호존중과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면 북이 점진적으로 우리 체제 쪽으로 수렴되어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정상회담 대화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 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쪽 37행~4쪽 4행)

결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통일의 방법론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평화와 신뢰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런 현실적 의미가 없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통일문제는 아예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 방법론을 굳이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면 ‘선평화 후통일’론이었습니다. 합헌적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한 평화통일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전략이 없습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헛구호를 걸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아무 의미 없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며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지 않는 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리도 없고 신뢰가 들어설 가능성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싶다면 그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평화-후통일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IP
2

자주와 친미에 관한 견해

‘자주’는 북이 가장 높게 내세우는 이념이며 가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남북 8천만 우리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은 ‘자주’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오후 5시부터 열렸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와의 회담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무려 45분 넘게 우리 정부를 질책하고 훈계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 민족끼리 하지 않고 외세 즉 미국에 휘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무례한 것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꼭 참다가 마지막에야 몇 마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하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왜 자꾸 우리를 빼려고 합니까? 내일 김정일 위원장이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런 식이라면 보따리를 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항일무장투쟁 주체가 국가를 세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 망명객 출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일제 부역자들을 등용해서 건국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덕적 정치적 우월감을 지니고 대한민국을 대해왔습니다. 게다가 남이 미국에 종속되어서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풀지 못하고 매사에 미국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남측이 자주성이 결여되어서 우리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식이 고지식하고 순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주’는 북 체제의 자존심이 걸린, 최고 지위를 가진 가치였기 때문에 자주를 좋은 것이라고 띄우고 대한민국이 친미국가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각을 에둘러 반박하고 설득했습니다. 대화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에 대한 발언입니다.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영국 토니 블레어 자문을 하는 기든스가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 유럽을 중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해방될 때, 분단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 (15쪽 35행~16쪽 10행)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소신대로 한다는 의미의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자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던지시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성취한 제1차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쪽 14행~17쪽 6행)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예시하면서 ‘자주’ 문제를 흑백논리로 볼 것

이 아니라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흐름을 강화하려면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한 ‘자주’를 실현하기 어려운 세계사적 조건과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북이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제사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7천만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실제 중심을 잡는 이런 위치에 가자면 경제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경제를 유지하자면 교역을 활발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실 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지, 시장에는 발을 디더야지, 안 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 32행~18쪽 5행)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다음 복핵문제와 6자회담으로 이야기를 넓혀 나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고했습니다. 평소 어법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꼬운 걸 못 참는 게 자주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삶을 지키려면 참을 때 참고 굽힐 때 굽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제3자인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고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전 체주의 국가의 최고권력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말을 끌고 들어와, ‘더럽고 아니꼬와도’ 참고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풀라고 권했습니다. BDA 사건 등 미국의 조치가 옳지 않지만 미국이 힘이 세니까 북이 고립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벗이 되고 힘이 되어 줄 테니, 고립으로 가는 ‘자주’ 말고 진짜 ‘자주’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20쪽 29행-21쪽 18행)

대화록을 보면 이 대목은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자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누가 그에게 이런 비판과 조언을 해 주었겠습니까? ‘자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기나긴 ‘강의’를 경청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21쪽 19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반응은 회담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 대통령님’이라고 말하고 ‘옳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록을 보면 경직된 분위기가 이때부터 누그러지면서 오후 회담 개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IP
3

공동어로구역과 NLL

남북 정상들은 공동어로구역과 해주 개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으로 넘겼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NLL과 북측 해상군사경계선 사이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하면서 안보군사 지도 위에 경제평화 지도를 덮어씌우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10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

로 설정하자고 했지만 NLL이 북측 해안에 너무 근접해 있는 현실과 어장 상황을 고려하여 NLL을 중심으로 같은 면적의 해역을 묶는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측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은 합참통제선 이북에 있는 NLL을 기점으로 한 것입니다. 합참통제선과 NLL 사이 지역은 우리 해군 함정도 합참통제 하에 움직이고 일반 어선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육상에 있어 DMZ와 남방한계선 사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어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장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못쓰던 어장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를 감독하려면 남북 양측이 해양경찰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군사충돌 가능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면 NLL을 '포기' 또는 '상납'한 것인가? 등면적은 안되고 등거리리는 되는가? 이런 논리라면 북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 개성을 '포기'한 게 됩니다. 해수에 공단을 만들면 해주를 남에 '상납'한 것이 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두 곳을 우리에게 '헌납'하는 게 될 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게 NLL 포기라면 개성공단 설치하는 북

이 휴전선을 우리에게 헌납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DMZ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남북이 합의해서 DMZ 안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든다면 휴전선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DMZ 생태공원 계획은 육지의 안보군사 지도 위에 생태평화 지도를 덮어씌우는 구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다의 안보군사 지도 위에 경제평화 지도를 덮어씌우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것처럼 육지의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오전 회의에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안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영토선을 상납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DMZ는 북한과 미국, 중국 정부가 합의해 1953년 7월 27일 밤 발효된 정전협정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제법적 지위가 확실합니다. 반면 NLL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경계선이 아니라 정전협정 발효 후 한 달이 더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해상 군사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일 뿐입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북측에 북방한계선 설정사

실을 통보해 주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측은 해군력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NLL 남쪽 해역은 20년 동안 별 문제없이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한 우리의 해역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NLL은 주로 우리 군함과 어선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해상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군력을 크게 증강한 북이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서해 NLL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육상 군사분계선을 연장해 우리의 NLL보다 훨씬 아래에 직선을 긋고 그 선 북쪽의 해역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이후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과 지키려는 우리 사이에 수많은 군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평화협력특별지역을 설치하면 NLL을 북에 상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NLL은 그대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군사분계선으로서의 의미를 잃을 뿐입니다. 등거리든 등면적이든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똑같이 자기 해역을 내서 만든 공동어로구역에는 남북한 어선이 자유롭게 고기를 잡고 남북 해경이 배치되어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NLL은 헌법상의 영토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 사실상의 영토선으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단과 한국전쟁이 만든 경계선과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좌절



‘10.4공동선언’의 정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한 선언적 성격이었다면 10.4공동선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은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남북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위한 노력 ③남북의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 ④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⑤남북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 ⑥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발전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의 권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10.4공동선언의 새로운 점 또는 핵심은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였습니다. 경제협력 사업을 안정적 기반 위에서 펼치는 데 필요한 군사적 협력과 평화 보장 장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남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측 김덕수 내각총리가 만나 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

담에서 총리들은 49개항으로 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두 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의 대폭적 개선과 아울러 해주경제특구의 건설, 해주항의 활용,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등 10.4공동선언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과 추진일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 획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북측은 우리의 NLL과 자기네가 주장하는 해상군사경계선 사이 해역을 고집했고, 우리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해역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면 정상회담은 물론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떻게 이처럼 이견이 충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까?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0.4공동선언 이행계획은 그것으로 사실

상 끝이 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국간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0.4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최악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0.4공동선언의 무효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을 뿐, 10.4공동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차례 남북접촉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설전 끝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0.4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왜곡·날조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 전문 모두 불법유출돼 2012 대선때 악용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의해 최장 30년까지 공개를 금지한 이른바 ‘지정기록물’입니다. ‘지정기록물’은 그것을 생산한 노무현 대통령 자신만 열람할 수 있으며,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할 때 대화록을 비롯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중요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정해 대통령기록관에 밀봉했습니다. 다만,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의 남북정상회담 과정과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도 대화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후임자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돕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의 정상회담 내용을 알 수 없다면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대화록 발췌본에 이어 전문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표지에는 이것이 2008년 1월 ‘생산’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김성호 국정원장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해 열람하도록 했다면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화록을 남겨 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혼자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것을 열람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함으로써,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또는 발췌본이 국가기록원 외부에 존재하며 자신이 그것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록 전문이 모두 공개된 지금 그가 이날 한 주장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 또는 왜곡인지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문헌 의원 발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같이 허위·왜곡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신문들조차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화록은 발췌본만 유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도 유출되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 권영세는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어느 월간지 기자가 포함된 몇몇 지인들에게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 출처인) 대화록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테서 거기서 들여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¹⁾

컨틴전시(contingency)는 '만일의 사태'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만일의 사태'란 '박근혜 후보의 낙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뜻합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발언입니다. 선거관세가 박빙으로 나타났는지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컨틴전시 플랜'은 나흘 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김무성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직후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다 따라잡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던 때입니다.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외국

1) <오마이뉴스>, 2013년 6월 26일 기사

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NLL공세는 논리도 없고,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갖고 싸워왔고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보고 풀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요구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없애버렸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말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노무현이가 김정 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북반쳐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남측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습니까. 친북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²⁾

2) 〈민중의 소리〉, 2012년 6월 26일 기사

이것은 대화록 발췌본이 아닙니다. 전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에는 없고 전문에만 있는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김무성은 대화록 전문을 읽었거나,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읽고 작성한 메모를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 연설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가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미 대화록을 입수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이념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김무성 등 박근혜 후보 선거참모들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만큼 대화록이 국정원과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어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6월 2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회의록 공개를 비판한 남경필 의원을 훈계하면서 한 말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가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선 때 공개가 안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주욱 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더라. 그때 기자들이 내 발언을 다 녹음도 했을 텐데 왜 그때 그게 보도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공개에 실패한 것이지, 결국 그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가지고 자꾸 절차적 문제를 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이걸 강력히 밀고나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³⁾

국정원이 공개하기 훨씬 이전에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은 이미 국정원과 청와대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록을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활용했는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박근혜 후보 선대위 핵심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불법 유출과 열람, 정치적 오용을 지휘하거나 실행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소위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발췌본을 열

3) <뉴스앤뉴스> 2013년 6월 26일 기사

람시킨 데 이어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발췌본과 전문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전세계 모든 정부와 언론인들이 10.4남북정상회담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하고 비밀등급을 해제한 다음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이전에 그것을 입수해 열람하고 그 내용을 발췌한 정문헌, 김무성, 권영세 등의 행위가 법률을 침해했다는 것은 다들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범죄의 용의자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대화록 왜곡 · 조작, 불법 유출, 정치적 악용..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국정원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청와대에 발췌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각각 하나씩을 포함해 최소한 둘 이상의 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청와대의 참모들이 만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발췌본마저 왜곡 · 조작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거친 표현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NLL 포기와 반대되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대

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유사한 표현은 대화록 전문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발췌본에는 아예 없습니다.

만약 발췌본에 고의적인 조작과 왜곡이 있다면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전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을 현직 대통령에게 허위로 보고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유출·공개로 대한민국의 외교망신과 국격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을 공개한 직후 외교 전문가들은 곧바로 ‘앞으로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제 세계 어느나라 정상이 대한민국과 진술한 정상회담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우려감과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대화록 유출·공개 그리고 왜곡·날조는 대외적으로 국격추락과 외교망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심각한 법률적·정치적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 김무성, 남재준 등 대화록 유출, 열람, 누설, 공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들



‘NLL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을 불법 공개한 다음날인 6월 25일자 신문 등 여러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췌록에는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화록 발췌록이나 전문을 읽어 본 뒤 이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한겨레

노 “NLL, 근거 없는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 포기 발언 없었다

8쪽 일대본 보나

24일 언론에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8쪽짜리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대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섬김에 대해 북한관측(한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30수세에서 주장하는 평화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남북이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김정일 먼저 말문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 제안
노 “서로 군사철수 공동어로...평화지대 만들자”

대화록 일대본을 보면, 연평섬 등 남북간 사해 한탄해 대해 처음 말문을 연 것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관계와 우리측 한 군사관계인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서 제안한다.(8쪽) 북한 김정은 전도, 남북간에 우방적인 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8쪽)에서 제안을 하는 사해한을 인정하기는 게 중요한 것이었다(8쪽)를 전격적으로 한 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이라고 대답했다. 두 정상 사이의 논리가

“연평섬 일대(남한)인 전부 다락 일대(북한)도 놓고 앉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위협을 고쳐내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자”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알렸다. 김 위원장의 뜻에 안을 받아들이는 데도, 자신의 구상을 함적 김 위원장이 동의를 이끌어낸 셈이다.

노 대통령은 발언을 보면 “사해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 구에 공동 개발도 하고, 남북사이는 어떤, 매우 대화를 안 해서 공동개발구역도 만들면서 동맹도 맺는다”

2007년 10월 10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수는 이날 평양에서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2007년 10월 10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수는 이날 평양에서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발췌록에 “BDA 문제는 미 잘못”
김 위원장 설득하기 위한 발언

30 7-8 15 0600

경향신문

국정원 발췌본에 ‘노 전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다

자극적 표현 중심 구성...의도적 호기심 자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서 사해 북방관측(한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30수세에서 주장하는 평화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남북이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한관계와 우리측 한 군사관계인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서 제안한다.(8쪽) 북한 김정은 전도, 남북간에 우방적인 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8쪽)에서 제안을 하는 사해한을 인정하기는 게 중요한 것이었다(8쪽)를 전격적으로 한 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이라고 대답했다. 두 정상 사이의 논리가

“연평섬 일대(남한)인 전부 다락 일대(북한)도 놓고 앉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위협을 고쳐내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자”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알렸다. 김 위원장의 뜻에 안을 받아들이는 데도, 자신의 구상을 함적 김 위원장이 동의를 이끌어낸 셈이다.

노 대통령은 발언을 보면 “사해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 구에 공동 개발도 하고, 남북사이는 어떤, 매우 대화를 안 해서 공동개발구역도 만들면서 동맹도 맺는다”

2007년 10월 10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수는 이날 평양에서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2007년 10월 10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수는 이날 평양에서 사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궁극에는 남북 대립의 산물인 연평섬의 존재 자체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발췌본에 “BDA 문제는 미 잘못”
김 위원장 설득하기 위한 발언

30 7-8 15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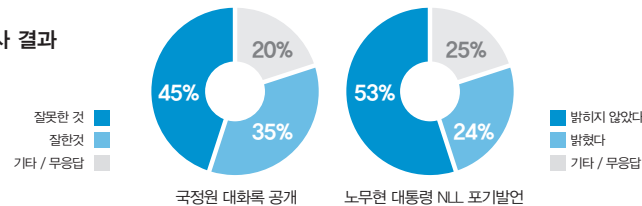
일부 보수언론들만이 노 대통령의 발언 중 앞뒤 문장을 잘라낸 채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식의 제목을 달아 보도함으로써 정상회담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나섰습니다.

또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등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정원이 공개한 이 발췌록이 곧이어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전문과 다르고 '~님'이라는 호칭을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의 근거로 제시된 발언 부분들이 대부분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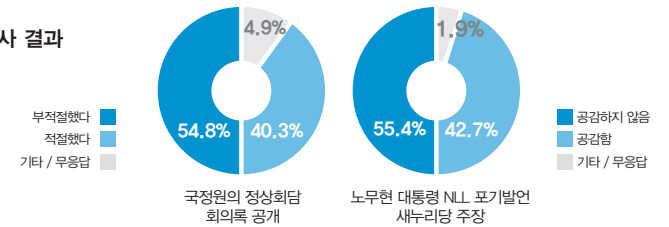
언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허위 왜곡주장, 국정원의 불법 대화록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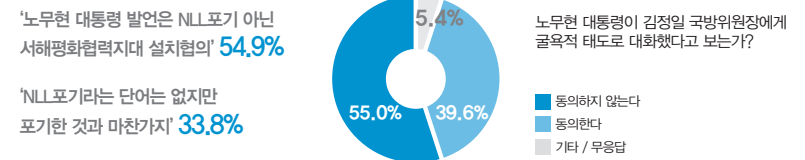
7월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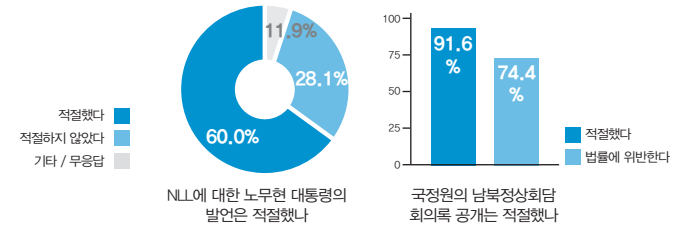
7월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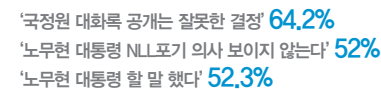
〈내일신문〉〈디오피니언〉 7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경실련 6.28~7.1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학자 및 연구원 7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길리서치〉 7월 8일 여론조사결과



북에 NLL을 넘겼다는 허위주장, 도대체 누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땅따먹기 발언’ ‘두 남북정상의 단독회담’ ‘비밀 녹취록 존재’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왜곡과 날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2012 대선 직전 주장들

- ▶ 두 정상이 오후 3시에 단독회담을 했다
↳ **사실 아님**
(그 시간에 두 정상은 배석자를 둔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있었음)
- ▶ 북의 통일전선부가 만들어 우리측과 공유했다는 비밀 녹취록이 존재한다
↳ **사실 아님**
(공식 정상회담을 우리 측이 녹음해서 나중에 대화록을 만들었음)
- ▶ 미국의 땅따먹기'
↳ **발언 사실 없음**
- ▶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
↳ **발언 사실 없음**
- ▶ 북한 핵 보유 옹호의 대가로 북한에 도와달라고 했다
↳ **발언 사실 없음**
- ▶ 주한민국 철수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동조했음
↳ **그런 사실 전혀 없음**

정문헌 의원은 2013년 7월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자료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북한주장 해상경계선(1999년 북한 일방 선포)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 행위”라고 또다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림1) “회담 대화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대한 내용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의 앞뒤 문맥을 잘라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해평화수역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런 주장은 사흘만에 한 장의 지도로 허위·왜곡임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7월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구상’ 문서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제목의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림2) 이 지도에는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안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등면적’을 주장한 지도를 북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3)

이 지도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일관되게 지켜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부터 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회담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 조성'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 때문에 '12해리 영해기점 사이의 해역'을 주장한 북한과의 견접근을 보지 못해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것입니다. 이는 남북정상 간 서명된 10.4공동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당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림4)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 국방부 등은 NLL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 방침을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멋대로 날조하고 북한의 주장은 버젓이 확대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바로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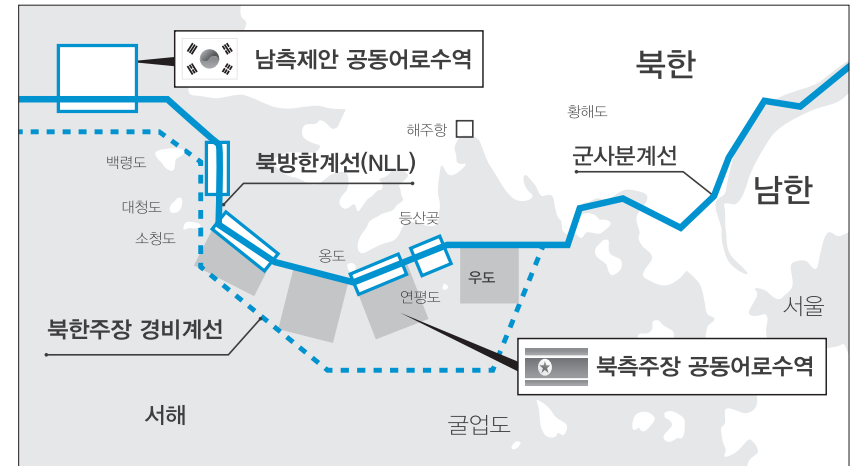
〈그림1〉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자료집을 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북한주장 해상경계선(1999년 북한 일방 선포)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장한 두 개의 그림들.



〈그림2〉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4일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주요 사업별 위치도' 제목의 지도. 이 지도는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지도에는 우리측이 제안한 'NLL을 기점으로 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이 표시되어 있어 참여정부의 NLL 고수원칙이 확인되어 있다.



〈그림3〉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월 열린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제시한 등면적 방안 지도 (윤호중 의원실 제공)



〈그림4〉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2월 2차 장성급군사회담 직후인 12월 14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그림. 이 지도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은 '영해12해리 이내'로 그려져 있는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이 내놓은 지도(그림1)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을 '영해12해리 이내'가 아닌 1999년 9월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그림 1의 붉은 실선과 점선)까지 제멋대로 확대시켜 그려놓았다.

2007 남북정상회담 Q&A



Q1

노무현 대통령은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말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나?

- ▶ 국정원이 2013년 6월 24일 불법으로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과 이 어 공개한 전문을 보면,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내용은 없음.
- ▶ 국정원이 발췌록을 공개한 다음날 <경향신문>과 <한겨레>등 언론들은 “국정원 발췌본에 ‘노 전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음.
- ▶ 그러나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록과 전문 가운데 노 대통령 말의 앞뒤 부분을 잘라낸 채 짜깁기해, 마치 ‘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보도함으로써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확산함.
- ▶ 심지어 국정원은 불법 공개한 발췌록에서 여러 문장과 표현들을 멋대로 바꾸고 자르고 짜깁기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음.
- ▶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수구보수언론들은 왜곡·날조된 발췌록과 전문에 노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없자 나중에는 ‘NLL 포기를 짐작케 하는 말이 있다’는 억지를 부리면 서 허위주장을 계속함.

- ▶ 대화록 발췌록과 전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수호하면서 이 지역을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큰 '평화구상'을 북측에 당연히 제안하고 설득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가진 대국민보고 공식 회견에서도 여러차례 'NLL을 지키고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음.

NLL(북방한계선)이란?



-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사령관이 남북한 간의 해상 군사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NLL을 설정함.
- 서해 NLL은 남한의 서해5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설정되었음. 당시 UN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에만 이를 전달하고 북에는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북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NLL이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이 되어왔음.
- 그러나 1973년 북측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해 앞바다는 남북간 '분쟁의 바다'가 됨. 북측은 1999년부터 NLL로부터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현재의 NLL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음. 특히, 참여정부 5년간은 NLL을 둘러싼 어떤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임을 명기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NLL은 헌법상의 영토선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 사실상의 영토선으로 기능을 해옴.
- NLL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되기 이전까지 남북이 지켜야 할 해상군사분계선임.
-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가 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과 인명피해를 없애고, 나아가 서해권역을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간 공동번영의 시대를 여는 관문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큰 구상 하에 북측에 '서해평화수역 구상'을 제안했음.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5차 장성급회의 이후 북측이 해양 경계선을 1999년 주장했던 남북한 중간지점(서해 5개 도서가 모두 북측수역에 포함됨)이 아니라 국제해양법에 따른 12해리 경계선(서해 5개 도서가 모두 우리 수역에 포함됨)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서해평화수역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음.

Q2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수역 구상'은 NLL을 포기하는 것인가?

▶ 노 대통령의 '서해평화수역 구상'은 '전쟁의 바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넓혀, 이 지역을 21세기 남북평화와 통일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이른바 '황해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동북아시아 정치·외교상의 큰 그림이었음.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구상을 담당하고 집요하게 설득하였음.

▶ 노 대통령의 '서해평화수역 구상'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NLL을 기점으로 한 등면적의 평화수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음. 이는 **NLL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을 제시한 것이므로 오히려 NLL을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이는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정상회담 직후 건넨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 지도에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그림이 명확히 그려져 있으며, 이는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임.

▶ 또한 이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다가 결렬된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도 알 수 있음.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 주장을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NLL을 수호하면서 '서해평화수역 구상'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임.

▶ 이 같은 사실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이 열릴 당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실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월 열린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제시한 등면적 방안 지도 (윤호중 의원실 제공)

Q3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발설·공개, 무엇이 문제인가?

- ▶ 새누리당 정문헌,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이 대화록의 내용을 발설·유출하고 남재준 국무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되어있는 '지정기록물'임. '지정기록물'은 이를 생산한 노무현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으며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열람할 수 있음.
- ▶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왜곡 발설한 데 이어, 김무성 의원(당시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거유세 도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음. 이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전에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발설·유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 위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등의 혐의로 정문헌, 김무성, 서상기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임.

-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발설·공개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외교망신을 불러오고 국격추락을 불러옴. 국가간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국가기밀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브리핑 내용이 아닌 정상간 회담 대화록을 유출·발설·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 ▶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발설·공개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진솔하고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보누설자'라는 비판을 가하는 등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위신 추락과 국가망신을 초래함.
- ▶ 새누리당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화록을 유출·발설·공개한 데다 대화록 내용까지 왜곡·날조한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국론분열과 갈등, 한국 정치의 퇴행, 민주주의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등 엄청난 국력낭비를 불러오고 있음.

Q4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거짓인가?

-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무현 의원은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밀 단독회담을 했다' '미국의 땅따먹기'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 '북한 핵보유 옹호의 대가로 북한이 도와달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동의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음.
- ▶ 그러나 정무현 의원의 이런 주장은 언론의 보도와 대화록 공개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그럼에도 정무현 의원은 2013년 7월에도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북한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내놓음.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주요 사업별 위치도' 지도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에 제시된 우리 국방부의 공동어로수역 등면적 방안 지도가 공개됨으로써 모두 거짓임으로 판명됨.
- ▶ 국정원과 국방부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국방부는 하룻만에 이를 번복하였고 외교부장관 역시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당시 참여정부에서 NLL포기 구상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등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의 주장이 거짓임이 속속 드러남.

- ▶ 정무현 의원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계속 또 다른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국론을 분열하고 온 나라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음.
- ▶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종편방송 등 일부 수구언론들도 새누리당 정무현·김무성·서상기 의원 등의 주장이 거짓임이 판명됐음에도 이를 마치 사실인 양 계속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Q5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의 주장은 왜 '이적행위'이며 새누리당이 '대화록 논란'을 계속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 ▶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이 있지도 않은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을 유포하면서 마치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북한에 넘겨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
- ▶ 만약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런 허위주장을 북한이 악용해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음.
- ▶ 새누리당과 국가기관인 국정원 등이 시작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①사실상 '거짓 주장'에 의해 시작됐고 ②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왜곡·날조임이 계속 드러났으며 ③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발설·공개가 모두 불법임이 명백한 데다 ④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⑤국민들이 국격추락·외교망신·국가 실익 없는 정쟁 등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 데도 새누리당이 이 논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음.

- ▶ 또 국격추락과 국론분열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발설·유출·공개한 뒤 왜곡·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내고 공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비열한 행태임.
- ▶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모식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2012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임을 보여줌.
- ▶ 국민과 언론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발설·공개 사건에 대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넘어서는 불법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임.